

더불어민주당, 호남민심 되새겨야

의정단상

강수훈
광주시의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세계 맞붙었던 담양군수 재선거가 끝났다. 조국혁신당 후보는 51.8%를 얻어 48.2%를 득표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제압하며 900여표 차이의 신승을 거뒀다.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패배했고, 신생정당 조국혁신당은 전국 첫 지지체장을 배출했다. 이번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석패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흔히 선거의 승패를 가능할 3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인물, 구도, 이슈 측면에서 먼저 생각해본다.

인물의 문제일까. 청와대 경험으로 많은 정치적 인맥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돕기 위해 이재명 당 대표는 물론 전국적으로 명성있는 국회의원 50여명이 담양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다. 선관위 법정 토론회에서는 젊은 후보답게 지역의 비전을 충분히 보여주며, 노련한 언변과 세련된 매너를 뽐냈다. 담양의 미래를 맡기기에 손색없는 후보였다. 아무진 후보라는 슬로건으로 상가와 장터 등 현장을 돌며 바닥 민심에 호소했고, SNS 등 온라인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열정적으로 선거운동을 펼쳤다.

구도의 문제일까.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약점이 있다면 담양에서 나고 자란

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거주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담양을 품고 세상으로 나갔던 후보가 이제 세상을 품고 다시 담양으로 돌아왔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은 오히려 이 부분을 전략적으로 파고들며 무소속 군의원 당선과 군의회 의장 경력의 토박이 프레임으로 선거 캠페인을 전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읍·면별로 필요한 정책을 발굴해 맞춤형 공약을 발표했지만, 선거 결과를 보니 결국 담양사람 프레임 높에서는 빠져나오지 못했던 것 같다.

이슈의 문제일까. 더불어민주당은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전국 속에서 치러지는 선거인만큼 조기대선과 정권교체를 위해 지지해달라고 호소했고, 조국혁신당은 추후 대선에서는 힘을 하나로 모을테니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에서는 정당 간 경쟁이 필요하다고 맞붙을 뻔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집권을 해서 대통령, 전남지사, 국회의원, 군수가 같은 당 소속으로 마음을 하나로 모을 때 비로소 큰 예산을 받아와 지역 발전을 꾀할 수 있다고 말했고, 조국혁신당은 무엇이든지 과하면 탈난다며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슈는 선점했지만, 주도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이외에도 느닷없다고 말하기 어려운 예측가능한 여러 변수들이 있었다. 담양은 꾸준히 더불어민주당에 높은 정당 지지를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군수 선거에서 무소속 당선자를 두 번이나 배출한 적이 있었다. 1995년 제1회 지방선거 시작부터 직전 선거인 제8회

지방선거까지 민주당과 무소속 후보 간 접전도 계속되었다.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의 고리가 마지막 경선 불복으로 이어지며, 경선 후유증이 본 선거의 새로운 이슈로 부상하기도 했다.

선거 결과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있겠지만, 담양군수는 물론 고흥군의원 선거에서도 무소속 후보가 당선됨으로써 호남에서의 더불어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으로 직결되는 것이 아님을 확인한 만큼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호남민심에 빨간 불이 들어왔고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분명해졌다. 이 와중에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피해야 할 분석은 정신승리로 모든 문제를 귀결시켜버리는 것이다. 선거 패배 원인을 후보나 몇몇 특정 인물의 탓으로 돌리면서 '어차피 안되는 거였고, 결국에는 소용없었어'라고 접근할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향후 치러야 할 선거를 앞두고 값진 교훈을 놓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때만 찾아와서 호남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호남에게 적극적인 구애를 펼쳐달라는 메시지도 있었음을 잊지 않아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실패를 잊은 자는 그 실패를 되풀이한다'는 금언을 기억하고, 호남이 더불어민주당의 동원대상이나 동행공동체로 나아갈 전략을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할 때다. 이 글을 빌어 더불어민주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인 나부터 먼저 잘해야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한다. 내 탓이다. 내 탓이다. 내 탓이다.

社說

'내란 스트레스' 완치 현재 파면 선고 뿐

국민 정서 반영된 판결 나와야

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한다.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만, 비상계엄 선포 후 122일 만이다. 현재의 판결이 늦어지면서 국민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극에 달할 정도다. 이른바 '내란성 스트레스'라는 신조어까지 나왔다. 본래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한 불안을 의미하는 신조어였다. "2시간 짜리 내란이 어디 있고, 우려했던 사태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내란 수괴의 어처구니없는 변명은 국민들의 분노를 키우는 불쏘시개가 됐다.

시민들은 내란 사태 이후 벌어진 서부지법 폭동, 윤 대통령의 석방 등을 언급하며 정치적 양극화가 심해지고 사법제도의 근간이 흔들리는 모습에 큰 충격을 받았다. 윤 대통령 지키기에 몰두한 집권 여당은 '극우세력'과 손잡고 진영 갈등을 부추겼고, 국민 불안감은 대한민국 정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다. 현재의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자 '5대 3 교착화' 등 온갖

설들도 난무하고 있다. 현재의 철통보안 속에 진행되는 재판관의 속의가 깊어짐에도 일부 세력의 '희망고문'이 사실인 양 사회혼란만 가중시켰다.

탄핵 찬반 시위도 극에 달하고 있다. 이런 다각적인 스트레스 탓에 국민들은 지칠 대로 지쳐있다. 내란 스트레스가 만성질환으로 자리 잡았다. 오죽했으면 일부 시민들은 윤 대통령의 '윤'자만 나와도 소스라친다고 한다. 일종의 방어 기제처럼 거부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다. 그들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넘어 속이 답답하거나 소화기가 되지 않고, 두통을 느끼는 등 신체화 증상을 경험했다. 사소한 일에도 분노조절이 어렵다고 호소하는 이들도 있다고 한다. 무엇보다 그들의 '내란성 스트레스'가 개인적 노력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만성 고질병으로 바뀐 내란 스트레스를 해결할 처방전은 없을까? 국민들은 고통을 감내하며 오랜 기다림 속에 현재의 결정을 지켜보고 있다. '내란성 스트레스' 종식은 현재 재판관의 결정에 달려있다. 올바른 진단과 치료는 단언컨대 '윤석열 탄핵', 이 다섯 글자가 아닐까 싶다.

지역경제 후폭풍 몰고올 트럼프발 위기

피해 최소화 민·관 함께 나서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 한국산 수입품에 25%의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지역 수출 업계로서는 비상 상황이다. 이번 관세 부가가 지역 수출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와 가전까지 확대되면서 대한민국뿐 아니라 지역산업까지 초유의 후폭풍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광주 제조업의 30%를 담당하는 기아 광주공장은 지난해 생산된 자동차 51만 3782대 가운데 내수 18만 1665대를 제외한 33만 2117대를 수출했다. 전체 물량의 65%에 이른다. 미국 수출은 쏘울, 셀토스, 스포티지 18만여 대로 전체 물량 대비 약 35%, 수출 물량 대비 약 55% 수준이다. 삼성전자 광주공장도 수출 차질에 따른 수익성 감소가 불가피하게 됐다. '광주사업장은 안정적 물량 운영과 시설투자, 경쟁력 강화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는 게 삼성 광주공장의 설명이지만 긴장을 늦추지는 못하는 모습이다.

탄핵 정국으로 가뜰이나 침체된 지

역경제가 관세전쟁까지 더해질 경우 그 충격은 가능하기 어렵다. 지난해 2023년 기준 광주지역 대미 수출액이 54억 9000만 달러로 광주 전체 수출의 31%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25%의 관세가 부과될 경우 수출 차질에 따른 충격은 엄청나다. 당장 광주연구원은 최근 미국의 보편적 관세 10%p 부가를 가정한 손실효과를 분석한 결과 광주 지역내총생산이 0.13% 감소될 것이라는 추산치를 발표했다. 한국은행도 지난해 2월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로 낮췄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최악의 침해국'으로 분류했다. 안타까운 것은 한국 정치에서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는 미온적이고 정치권은 정쟁만 남친다. 이래선 안 된다. 정부는 어느 때보다 엄중한 통상위극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한다. 정치권도 정쟁을 멈추고 위기극복에 동참해야 한다. 노·사 등 경제주체의 각성도 필요하다. 경제규모가 열악한 광주·전남은 작은 파장도 전방위로 확산될 우려가 높다. 지금은 민·관이 함께 피해를 최소화시킬 때다.



사진으로 보는 세상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 시간) 백악관 경내 로즈가든에서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라는 행사를 열고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있다. 한국에 대해서는 25% 상호관세를 산정했다. AP/뉴시스

서석대



'국민의 신뢰에 명백한 손실을 줬고, 법과 정의를 손상시켰다.' 1974년 7월 29일.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탄핵을 결의했다. 1972년 37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닉슨 대통령은 1976년 치러진 대선에서 미 대통령 역사상 압도적인 표차로 재선에 성공했다. 하지만 선거과정 닉슨의 재선을 획책하는 비밀공작반이 워싱턴 워터게이트 빌딩에 있는 민주당 사무실에 도청장치를 설치하려다 발각되면서 심각한 정치적 위기로 내몰렸다. 수 차례 자신과의 관련성도 부인했다. 하지만 이 사건에 백악관이 관련했다는 것이 밝혀지고 의회의 탄핵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닉슨은 그해 8월 9일 사임했다.

"주문, 피정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지난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이정미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이 재판관 8명 만장일치로 국회가 청구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해 인용을 결정했다. 당시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는 뇌물수수, 대통령 권한남용, 언론 자유 침해, 직무유기 혐의 등 국정농단 사건이었다. 혐의 내용도 13개에 달했다. 결국 현재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면서 박 대통령은 임기 352일을 남기고 직위를 박탈당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이면서 세계 정치사에서도 보기 드문 굴욕적인 사건이었다.

미국도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도 권력 핵심부가 연루된 대형 비리 사건은 몇 가지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국민적

신뢰가 무너지고 이를 은폐하려 한다는 것과,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는 것이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저지른 비리들로 그 권력이 결국 파멸에 이른다는 교훈도 준다. 당장 닉슨의 워터게이트 사건은 도청 자체보다 대통령의 거짓말과 도덕성에 대한 문제가 컸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도 비선실세인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이를 은폐하려는 대통령의 행동들에 대한 국민들의 단죄였다. 끈질긴 기자들의 취재와 폭로도 숨겨진 진실을 밝혀내는 열쇠다.

윤석열의 자업자득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내린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 111일만이다.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군대를 동원해 국회 활동을 방해한 행위 등이다. 현재는 과연 어떤 판단을 할까. 중요한 것은 현재의 선고와 관계없이 윤 대통령은 이미 국민에게 탄핵을 당했다는 사실이다. 그는 의도적인 거짓말로 국민을 분열시켰고, 이를 은폐하려 온갖 선동을 쏟아냈다. 도덕성을 잃었고 국민의 신뢰도 사라졌다. 리더십도 무너졌다. 이런 이가 대통령에 복귀한 들 제대로 된 정치는 불가능하다. 검찰총장에서 대통령까지 거침이 없었던 윤석열의 정치여정,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면 윤석열의 정치가 뒤틀린 것은 재임 기간 독선과 불통으로 나라를 절단 냈던 윤석열의 자업자득이다. 참담하고 부끄러운 오늘이다.

이용환 논설실장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경영지원팀 (062)510-0421
	기사제보	(062)510-033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문화체육부 (062)510-0351
	취재1부	(062)510-0380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취재2부	(062)510-0394	사진부 (062)510-0391
www.jnilbo.com m.jnilbo.com	정치부	(062)510-0340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